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엔화약세 심화로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혼돈 지속
- 이 슈 : (경제)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산업) 우리나라 취학·진학 구조 변화하나?

■ 노후생활

- 테 마 :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 세 심 록 : 치타 델레
- 북 리 뷰 : 중국뿐인 세상 - 중국식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 탐사기

□ 동향

○ 엔화약세가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등이 혼돈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엔저 심화 및 통화당국자들의 엔저 우려 발언 등으로 10월 국내 무역 흑자 월간 역대 최고에도 불구하고 1,100원선을 상향돌파하며 연고점 경신
 - 엔/달러 환율은 BOJ 부양책 시행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로다 총재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발언으로 115엔선을 상향돌파하며 '07.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 KOSPI,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우려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 지속
 -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엔 환율 급락으로 인한 수출株의 실적 우려로 KOSPI는 1,900 초반대로 하락

○ 10월 고용률 및 실업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취업자는 2,595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6천명 증가
 - 농림어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규모 축소
- 고용률은 60.9%,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4%p 상승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5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6만6천명, -1.5%), 육아(-5만명, -3.4%), 가사(-3만7천명, -0.6%)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1만3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55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증가, 구직단념자¹⁾는 42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8천명 증가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31	11/14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0.9	0.9	0.6	0.9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1.8	0.7	0.3	1.2	4.0	-2.7	-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1	1.1	1.6	1.4	1.6	1.4	1.1		-
	실업률(%)	3.2	3.1	2.8	4.0	3.7	3.3	3.4	3.3	3.2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48.4	151.3	241.3	226.6	78	73	76		
금융 지표	국고채(3년)(%)	3.13	2.79	2.90	2.87	2.82	2.50	2.56	2.54	2.41	2.18	2.17
	원/달러(원)	1,126.8	1,095.0	1,062.1	1,069.0	1,029.6	1,026.2	1,019.4	1,025.4	1,033.2	1,054.6	1,091.4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2,009.3	1,946.1	1,993.2	2,041.9	1,995.1	2,060.9	2,042.7	1,949.9	1,950.1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11/3~14의 평균값임.

1)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 이슈 : (경제)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²⁾

○ 연구배경

2014년 국민계정 개편과 함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이하 지식재산투자) 항목이 신설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주력산업의 노후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R&D투자와 비R&D투자(소프트웨어, 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를 포함한 지식재산투자는 중요소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국내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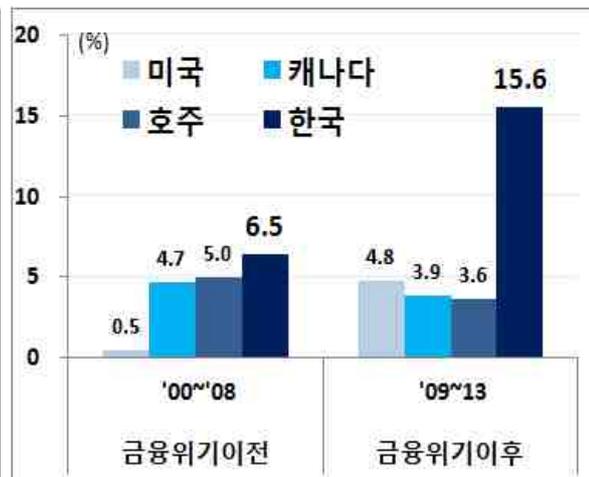
○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첫째, 국내 지식재산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0%에서 2013년 5.7%로 크게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7.0%에 달했다. 2013년 기준 GDP대비 투자비중은 미국(5.1%), 호주(2.5%) 캐나다(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무려 28.6%에 달했고, 2011년 유럽재정위기시에도 21.7%를 나타내면서 국내 경제 위기시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6.5%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2013년) 15.6%로 두배 이상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기여율은 동기간 한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하고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투자 및 주요국 GDP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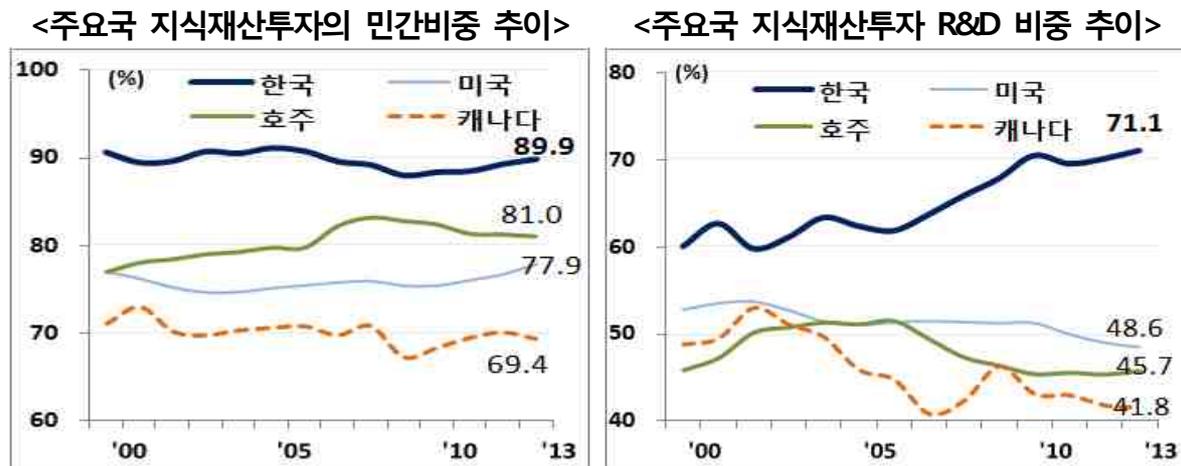


<주요국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 추이>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14-44호 (2014. 11. 07) 재구성.

셋째,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민간주도인 반면, 선진국은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국내 지식재산투자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은 89.9%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주요국인 미국(77.9%), 호주(81.0%), 캐나다(69.4%)는 민간비중이 우리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정부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선진국은 콘텐츠 등 비R&D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R&D 투자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R&D 투자 비중이 71.1%로 주요국인 미국(48.6%), 호주(45.7%), 캐나다(41.8%)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콘텐츠 등 비R&D 투자의 비중은 28.8%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시사점

국내경제에서 지식재산투자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첫째**,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투자 선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초과학기술 개발 및 R&D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콘텐츠 등 비R&D 부문에 대해서도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 **셋째**,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R&D 절대규모를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R&D 스톡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감한 투자여건 개선, 산업 경쟁전략의 혁신,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국내 성장잠재력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

최성근 선임연구원(2072-6223, csk01@hri.co.kr)

□ 이슈 : (산업) 우리나라 취학·진학 구조 변화하나?³⁾

○ 개요

한국의 학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나 인적자본 경쟁력은 세계 23위에 불과해 고학력화가 인력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한국 인적자본 경쟁력이 낮은 원인을 한·독 청년층의 진학과 고용 구조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

(진학 측면) 첫째,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고 있다. 국내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포함)은 2009년 77.8%에서 2014년 70.9%로 낮아졌다. 또한 OECD의 5A(아카데미적 고등교육과정) 기준으로도 한국의 진학률은 2010년 71%에서 2012년 69%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독일은 같은 기간 9%p가 급등하였으나 2012년 현재 53%에 불과하다. **둘째, 대학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 감소가 대학진학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 기준으로 한국의 전문대학 진학자는 2010년 17만명에서 2014년 14.9만 명으로 2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진학자는 2014년 29.2만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OECD 5B(단기 직업 고등교육과정) 기준으로 한국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독일은 상승하였다.

<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과 대학 입학자 수 추이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감.

< 한국의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별 진학자 추이(천명) >

연도	대학별 진학자 추이(천명)			
	총 진학자	일반 대학	전문 대학	기타
2005	418	252	143	23
2007	437	263	154	20
2009	448	273	157	19
2010	477	289	170	18
2011	470	279	174	17
2012	454	288	160	7
2013	446	289	151	6
2014	449	292	150	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3)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우리나라 취학·진학 구조 변화하나?” 14-41호 (2014. 11. 11.) 재구성.

(고용 측면) 셋째, 한국은 직업훈련 비중도 여전히 낮다. 한국은 16~19세 인구 중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2.1%로 독일의 40.9%와 격차가 크다. 넷째, 대졸이상 청년층의 고용도 저조하다. 한국의 대졸이상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2년 75%로 독일의 89%보다 14%p 낮는데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2012년 56.2%에서 2014년 54.8%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니트족도 독일의 2배 수준으로 인력 활용도가 낮다. OECD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고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비중이 한국은 18.5%로 독일의 9.9%의 약 2배가 넘는다. 특히, 대졸 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이 한국은 2013년 기준 15~24세가 9.9%, 25~29세 6.6%로 독일의 3.9%, 3.4%에 비해 높다.

○ 시사점

최근 국내 대학진학률은 하락했지만 일반대학 진학자는 꾸준히 증가해 '학력·입시위주'의 진학 환경은 지속된다. 이에 국내 취진학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고교 직업교육부터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대학들도 직업훈련과정과 해외취업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은 특성화하고 일반대학은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테마 :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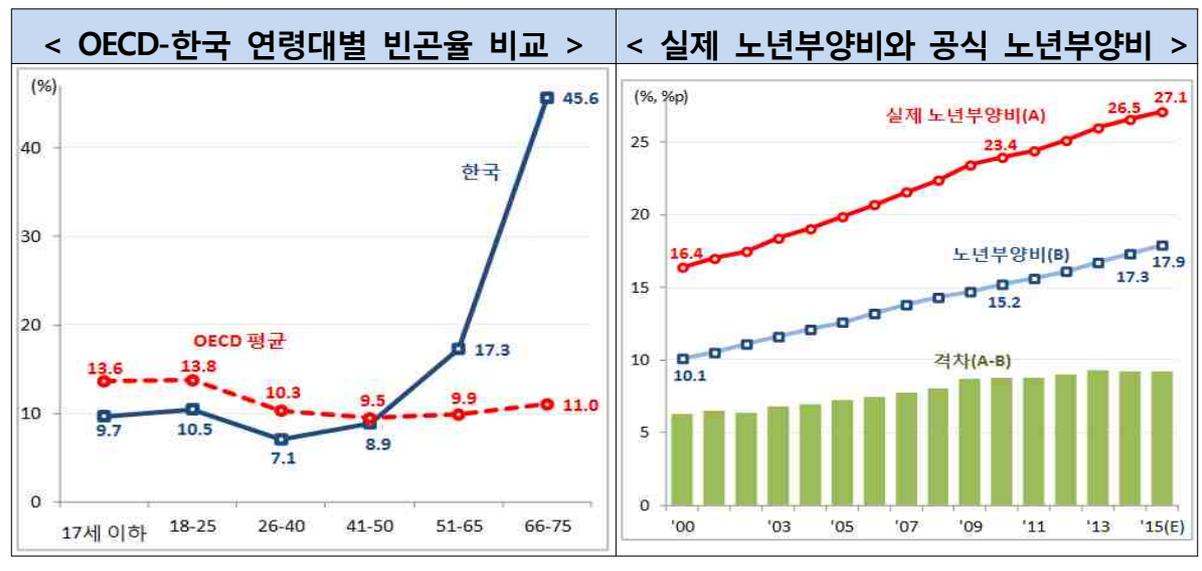
○ **요약**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가중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인 빈곤수준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국민은 50대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빈곤이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공식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14년 17.3%로 상승했지만, '실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6.4%에서 26.5%로 더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100명의 취업자가 27명의 노인을 부양함을 의미한다.

한편, 최저생계비 미만의 노인가구를 부양하기 위한 **노년부양 부담액은 연간 4.7조원**(2013년)으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이며,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은 월평균 29.9만원(연 358.6만원)으로 추정된다.

취업자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만원(2013년)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7만원에서 2013년 20.1만원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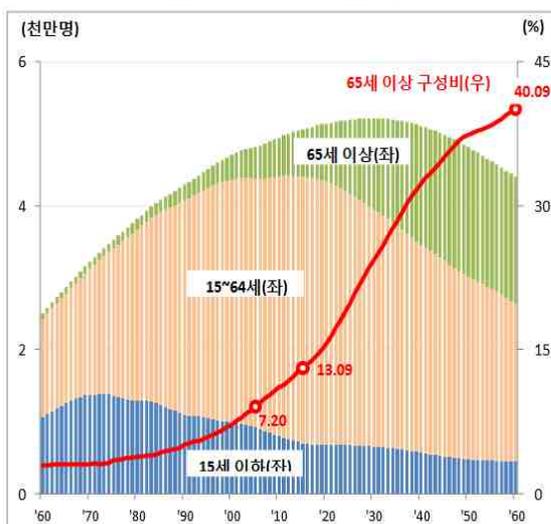
4) 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41호, 2014년 10월 29일.

□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 (연구배경)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노년부양부담이 가중

- 인구고령화(aging populations) :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증가하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 노년인구 : 2015년 662.4만명에서 2049년 1,799.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부양연령층(15~64세 생산가능인구) :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2016년 3,703.9만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7년부터 축소될 전망
 - 65세 이상 구성비 : 2000년 7.2%에 불과했으나, 2015년 13.1%로 상승하고, 2060년까지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고령사회⁵⁾ 진입(aged society enter)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
 -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임
 - 한국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18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간이 8년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 인구구조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 주요 국별 고령화 현황 >

(단위 : 년도, 년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도달 연도	고령화 사회	2000	1942	1970	1932
	고령 사회	2018	2015	1994	1972
	초고령 사회	2026	2036	2006	2009
도달 연수	고령 사회	18	73	24	40
	초고령 사회	8	21	12	37

자료 : 통계청.

⁵⁾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

○ (연구목적) 인구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노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액을 추정함

- 실제 노년층을 부양하는 계층은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닌 취업자임
 - 노년부양비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연령층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부양인구와는 거리가 멀고 체감하기 어려움
 - 특히, 15~19세, 20~24세 인구는 교육 과정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취업자 비중 및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낮음
- 노인부양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제 노년부양비'를 추정하고, 부담 수준을 화폐가치로 확인하는 '노년부양 부담액'을 측정함
 - 더욱이, 노인빈곤 수준 및 준비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방법) '공식 노년부양비'와 '실제 노년부양비' 각각을 계산하고,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노년부양 부담액을 추정함

- 공식 노년부양비 :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추계하고 있음
- 실제 노년부양비 : $\text{실제 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고용률})} \times 100$
 -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 중에서도 실제 취업자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연령층 인구의 비율로 사실상의 부양부담을 보여줌
- 노년부양 부담액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가구의 생계비부족분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 수를 추계하고, 해당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을 연간기준으로 계산
 - 부양연령층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노인가구 만을 보수적으로 측정
 - 최저생계비는 적정생활비 및 최소생활비 보다 보수적인 기준이며, 생계비 부족분을 가족관계가 없는 제 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 됨
 -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 = 노년부양 부담액/생산가능인구
 - 1인당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 = 노년부양 부담액/(생산가능인구×고용률)

□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 추정

① 고령사회 준비 현황

○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부양비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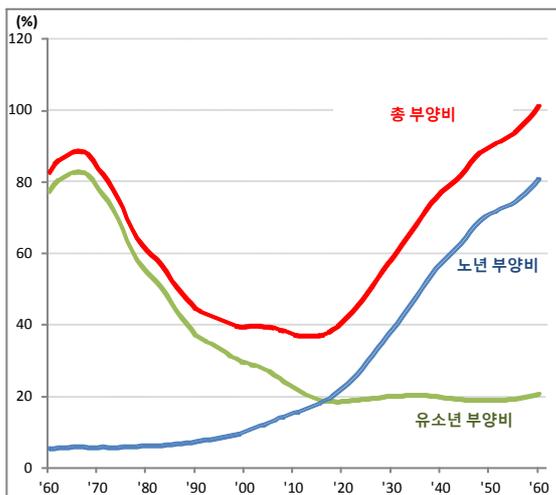
- 노년 부양비(dependency ratio of old age)⁶⁾ : 부양연령층의 부담 가중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가파르게 증가
- 2016년까지는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하회하다가 2017년부터 초과
- 부양연령층의 총 부양비가 노년부양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

-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io)⁷⁾ :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화

- 한국은 가임여성 1명당 1.25명을 출산하는 수준으로, OECD 평균 1.67명 및 세계 평균 2.47명에 크게 못 미침
-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34위이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저 수준
-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양연령층의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부양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현황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순위)

	출산율	순위	
		OECD (34개국)	세계 (224개국)
이스라엘	2.62	1위	75위
프랑스	2.08	2위	112위
영국	1.90	6위	140위
미국	1.75	14위	165위
독일	1.43	25위	202위
일본	1.42	29위	208위
한국	1.25	34위	220위
OECD	1.67	-	-
세계	2.47	-	-

자료 : UN, CIA World Factbook(2014).

6)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

7)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

○ 노인 빈곤수준 OECD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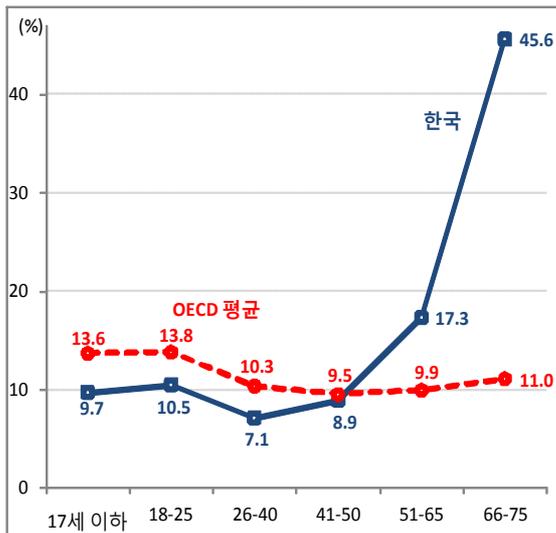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빈곤율 : 50대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빈곤 심화

- OECD국가의 평균 빈곤율 : 41-50세가 9.5%이고, 51-65세가 9.9%, 66-75세가 11.0%로 생애주기상 고령화되면서 완만하게 상승
- 한국의 평균 빈곤율 : 41-50세까지는 8.9%로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낮으나, 51-65세가 17.3%, 66-75세가 45.6%로 급격하게 상승
- OECD국가의 연령대별 평균 빈곤율은 50대 이후 상승폭이 미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히 상승
- 한국의 경우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50대 이상이 은퇴후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지만 자영업 동종업종의 과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 및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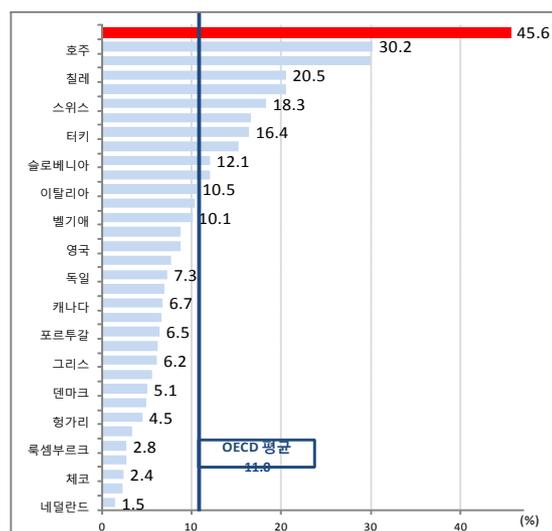
- 노인 빈곤율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1.0%를 크게 상회하고, 2위 국민 호주의 30.2%와도 크게 차이

< OECD-한국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 >



< OECD국 노인 빈곤율 현황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OECD(2012)자료 이용 계산.

주 : 노인 빈곤율(poverty rate)은 66-75세 기준임.

○ 노인 복지의 재정부담 가중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마련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은 1990년 1.5조원 수준에서 2011년 37.6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여 2011년 현재 3.04%를 기록
- 노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 및 보건·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현재의 재정지출성향이 유지된다면 재정건전성이 향후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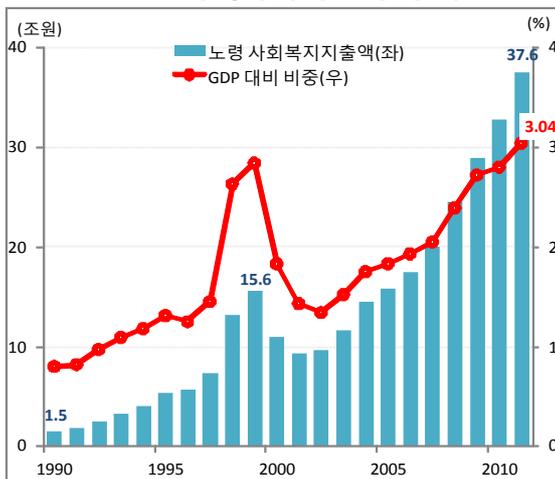
-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로 연금재정 부담 증가

-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IMF는 2010년 연차협의보고서(staff report)⁸⁾를 통해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현상이 향후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도 2050~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

- 노후준비의 공·사적 연금 의존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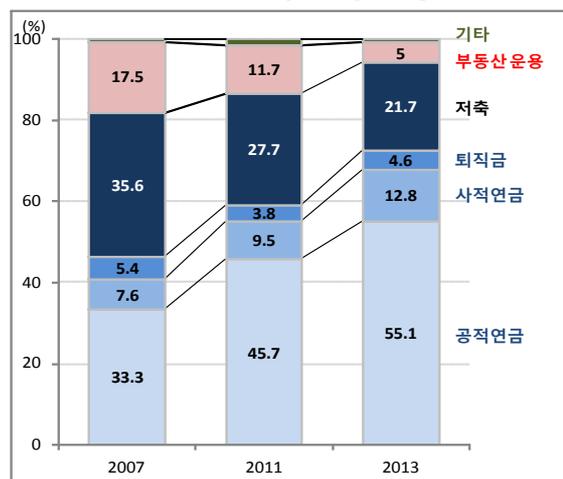
- 노후준비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2007년 각각 33.3%, 7.6%에서 2013년 각각 55.1%, 12.8%로 확대됨
- 노년층은 노후준비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연금 재정 부담 및 고갈 가능성이 증가함

< 노령 사회복지지출액 추이 >



자료 : 보건복지부.

< 노년층 노후준비 현황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호.

주 : 저축에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 기타에는 주식, 채권 등이 포함.

⁸⁾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untry Report No. 10/270, 2010.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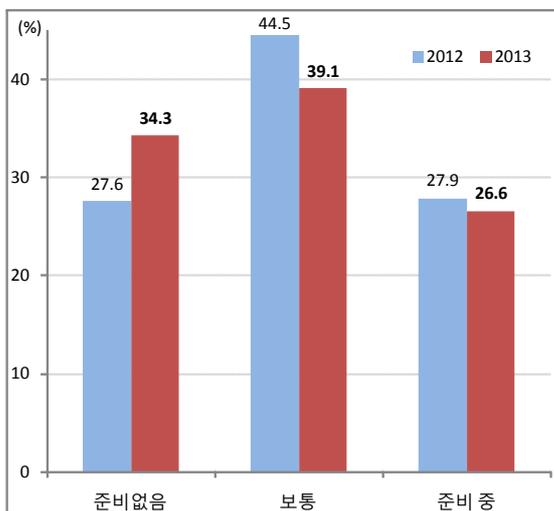
-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2013년 노후준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34.3%로, 보통 39.1%, 준비 중 26.6%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구 비중은 2012년 27.6%에서 2013년 34.3%로 확대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은퇴 후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을 야기

-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그 외 가구보다 높고 가파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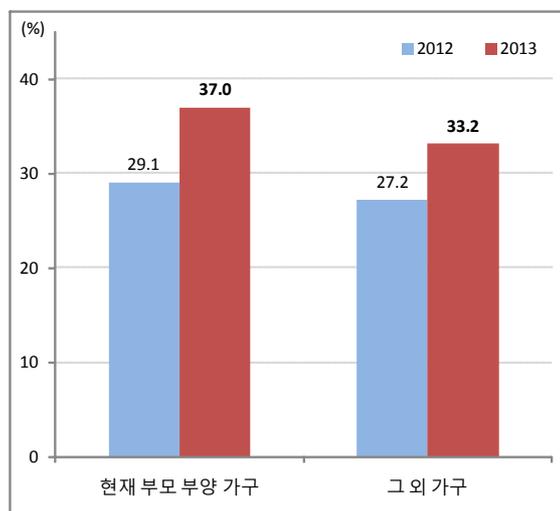
-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 2013년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37.0%로 그 외 가구 33.2%보다 3.8%p 높음
- 특히, 현재 부모를 부양 하는 가구는 2012~2013년 동안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7.9%p 상승하였고, 그 외 가구는 6.0%p 상승으로 이에 못 미침.
-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향후 노인빈곤이 가속화 될 우려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실태조사.

< 부모 부양 여부별 '노후준비 없음' 비중 추이 >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실태조사.

② 노년부양부담 추정

○ 취업자 증가속도보다 노년인구 증가속도가 빨라 '실제 노년부양비'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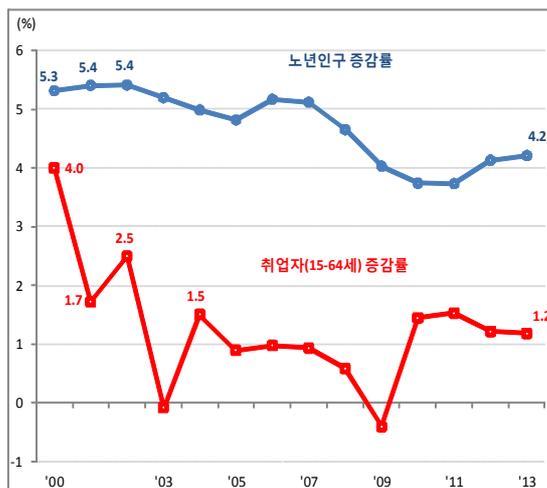
- 취업자 증감률이 노년인구 증감률을 지속적으로 하회

- 2000년 이후 노년인구 증감률은 3.7%~5.4%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15~64세 취업자의 증감률은 2000년 4.0%에서 하락하여 이후 2.0% 미만으로 하회
- 노년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그 속도에 크게 못미쳐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독거 노인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은 더욱 악화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경제의 노년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공식 노년부양비($\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와 '실제 노년부양비($\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text{고용률}}$)' 격차 확대

- 부양연령층(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노년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는 가치분소득이 있는 취업자로, 이들의 부양부담 즉 '실제 노년부양비'는 노년부양비보다 높음
- '실제 노년부양비'는 2000년 16.4%에서 2014년 26.5%로 상승하고, '공식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0.1%에서 17.3%로 상승해 격차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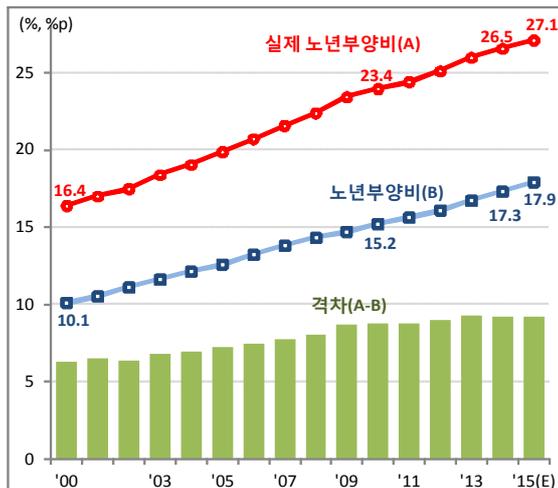
< 노년인구 및 취업자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 취업자는 15-64세 기준임.

< 실제 노년부양비와 공식 노년부양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정.

주1 : '14, '15년 고용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주2 : 실제 노년부양비=100×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고용률).

○ 연간 4.7조원의 노인가구 부양 부담

- 노인가구⁹⁾의 과반은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¹⁰⁾에 못 미침
 -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50.7%에 달함
 -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중 1인가구는 약 86만 가구로 독거노인 빈곤수준이 심각한 상황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평균 생활비 부족분은 월 29.9만원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42.3만원으로 생계비 부족분은 월평균 29.9만원으로 추계
 -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미만의 1인 노인가구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33.5만원으로 월 최저생계비 57.2만원에서 약 23.7만원이 부족함
-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 부담액은 연간 약 4.7조원
 - 2013년 노인가구 연평균 생계비 부족분은 약 358.6만원이고,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총 노년부양 부담은 4조 7,405억원에 이룸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및 노년부양 부담액 추정 >

		전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노인가구 (가구수)	2,605,248	1,594,945	959,167	42,793	8,343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가구수) - A	1,321,933	857,044	435,632	20,915	8,343
비중(%)	50.7	53.7	45.4	48.9	100.0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원)	422,867	335,245	577,762	589,823	917,465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생계비 부족분(원) - B	-298,834	-236,923	-396,469	-670,492	-628,934
총 노년부양 부담액(A×B×12)	연간 4조 7,405억원 (월평균 3,950억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3)를 이용하여 추정.

9)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가구원이 있다면 부양연령층이 아닌 경우(18세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인 미혼자녀 및 손자, 손녀 등)를 말함(통계청). 부양연령층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은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부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양가족이 없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노인가구만을 보수적으로 측정.

1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1인가구 572,168, 2인가구 974,231, 3인가구 1,260,315, 4인가구 1,546,399원)를 기준으로 함(2013년 기준).

○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 증가하고 있으나 노년층 고용확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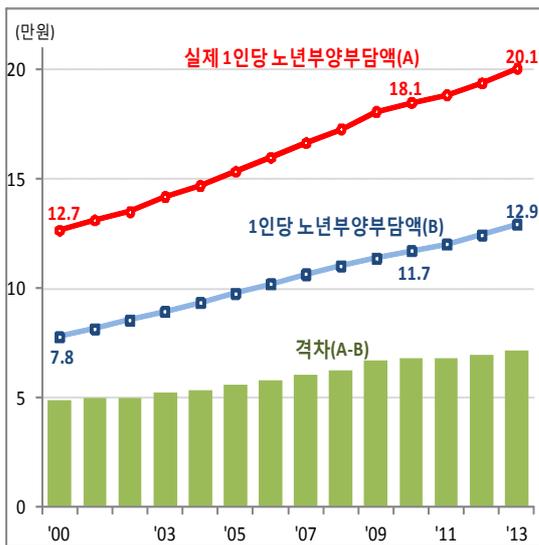
- 1인당 연평균 노년부양 부담액 : 20.1만원 부담(2013년 기준)

-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3년 20.1만원으로 2000년 12.7만원에서 빠르게 증가함
-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
-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 노년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속한 취업자(실제 부양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과 노년부양 부담액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노년층 고용확대가 미흡하여 부양연령층의 노년부양 부담 확대

- 부양연령층의 고용확대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의 고용확대를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
- 최근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확대 되었고, 고용률도 개선되었지만, 노년층 고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15-64세 고용률과 노년층 고용률의 격차는 2000년 32.1%에서 2014년 34.0%로 확대

< 1인당 연평균 노년부양 부담액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정.

< 노년층-생산가능인구 고용률 격차 >

(단위 : %, %p)

	2000	2007	2013	2014
노년층 (65세 이상)	29.4	31.1	30.9	31.3
15-64세	61.5	63.9	64.4	65.3
격차	32.1	32.8	33.5	34.0

자료 : 통계청.

주 : 2014년은 1~9월까지의 평균임.

□ 시사점

○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부양연령층의 고용확대 및 노인복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 필요

-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 증대 및 고령화 속도 지연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지속,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산여건이 개선될 필요

- 부양연령층의 고용확대 및 고용의 질적수준 증대를 통해 부양능력 제고

- 15~64세 부양연령층의 고용률 및 근로조건을 증대하여 충분한 부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노년부양부담을 완화
- 청년, 여성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필요
- 실제 노년층을 부양하는 계층은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있는 취업자 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

- 노인복지 재정건전성 강화

- 세대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시
- 최근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는 바,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
- 향후 국민연금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대상을 소득수준, 자산소유 정도,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른 적절한 분배방법을 논의하고 적용할 필요

○ 노년층의 세부 유형별로 노년부양부담 완화 및 지원방안 강구

- **근로가능 노년층 :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확대 필요**
 -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public laboring project)을 확대할 필요
 -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하는 소위 가교일자리(bridge job) 마련

- **근로불가능 노년층 : 저소득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지출 확대**
 -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함과 동시에 소득이 중단되는 '절벽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은퇴 환경 개선 필요

- **자산보유 노년층 : 연금, 역모기지 등 '친 고령사회 금융상품' 확대**
 -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 제도를 적극 활용
 - 노령연금 수급조건에 소득 및 자산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국민연금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을 확대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

□ 세심록(洗心錄)

○ 치타 델레

‘치타 델레’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요새안의 독립된 작은 보루, 내성(內城)’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치타 델레’라는 단어는 몽테뉴 때문에 유명해졌다. 몽테뉴가 명작 <수상록(Essais)>을 저술한 장소가 바로 저택 안에 있던 3층짜리 원형 탑이라고 알려지면서부터 ‘치타 델레’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15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몽테뉴는 청어와 대구 장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할아버지와 보르도 시청의 고위직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21세라는 젊은 나이에 보르도 지역의 판사가 될 수 있었다. 법관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몽테뉴는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15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미련 없이 접고, 고향의 영지로 되돌아왔다. 그는 저택 안에 있던 3층 원형탑 ‘치타 델레’에 머물면서 독서하고 글 쓰는 것을 즐겼다. 많은 책을 읽었고, 읽은 것에 주석을 달았고, 사소한 일상의 사건들에 관한 견해를 종이에 적어 두었다. 이렇게 그날 그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진 책이 바로 <수상록> 초판이다. 이후 보르도 시장에 선출되어 공직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페스트의 창궐로 다시 시골에 칩거하면서 <수상록> 증보판을 냈다. 이처럼 몽테뉴가 공직에서 벗어나 잠시 쉬면서 쓴 책이 바로 <수상록>이다.

직장과 가정에서 바빠 생활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땐 자신만의 ‘치타 델레’로 잠시 피신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보자. 굳이 별장이나 콘도처럼 근사한 장소가 아니어도 좋다. 스님들의 ‘동안거’, ‘하안거’처럼 오래 하지 않아도 좋다. 천주교의 ‘피정’이나 불교의 ‘템플 스테이’에 짧게 참가해도 좋다. 직장이나 집 주변의 길을 마냥 산책해도 좋다. 이렇게 자기만의 ‘치타 델레’를 만들어 놓고, 재충전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행복해 질 것이다. 당연히 업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나만의 ‘치타 델레’는 어디에 있고, 어떤 형식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현명한 사람과 마주앉아 나누는 한 번의 대화는
한 달 동안 책으로 공부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 중국 속담

□ 북리뷰 : 중국 뿐인 세상 - 중국식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 탐사기¹¹⁾

저자들(후안 파블로 카르데날과 에리베르토 아라우조)은 특유의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 끈질기고 치밀한 탐사를 통해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들 정권과 어떻게 결탁하며, 왜 이토록 탐욕스럽게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지, 중국의 자원개발 전략의 실체를 파헤침. 2009년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의 개도국으로 뻗어 나가는 중국의 확장에 대한 탐사 보도를 시작하였고, Foreign Policy, South China Morning Post, Radio France International 등에 기고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중국의 입김이 감지**
 -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지난 10년 새 중국의 중공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실업자 수가 급증
 - **(중국인 해외 진출의 어두운 뒷배경)** 해외 이주자들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 인력수출 대행사의 탐욕, 인력 수출로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려는 지방정부의 무관심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며 결국 이주자들만 불리한 상황에 내몰림
 - **(해외 자원시장 개발을 가장한 자원 약탈)** 기반시설과 천연자원의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원 가공산업 육성을 방치하고 천연 그대로의 자원을 채취

- **중국의 자원 침탈 사례**
 - **(러시아)** 러시아 북동부 지역에서 불법 벌채뿐만 아니라 숲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함
 - **(미얀마)** 중국 기업과 미얀마 장군들과의 결탁, 임의적인 토지 몰수, 귀금속 채굴만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공산업 발전에는 무관심
 - **(콩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주는 대가로 콩고의 구리(매장량 : 681만 톤)와 코발트(매장량 : 6,700톤)에 대한 30년 채굴권을 획득하였지만 이들 자원의 채굴 가치가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능가함

- **식민지 경제 모델을 답습하는 중국**
 - '상호보완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치장된 중국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와의 경제 관계
 - 그러나 실제로는 예전에 서구 유럽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사용했던 식민 지배 체제를 떠올리는 방식인 '너의 원료로 만든 나의 최종 생산품'이 중국과 이 지역들과 맺은 경제 관계의 기초 공식

¹¹⁾ 후안 파블로 카르데날 & 에리베르토 아라우조 지음, 전미영 옮김, “중국뿐인 세상 - 중국식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 탐사기”, 명량한 지성, 2014.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